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조경완



지금 MB(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일 미안해 하는 사람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반미면 어찌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친미적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왔다. 게다가 정상회담 바로 전날 극적으로 한미 최고기협상까지 타결했다. 최고의 환대라는 캠프 데이빗 목장 초대도 화기에예했다.

지경이니 얼마나 미안할까. 민심은 영리한 것이어서, 이번 최고기협상은 MB가 미국에 선물로 준 것이라는 걸 다 안다. "양국간 골이 깊다"고 마지막 날까지 말하던 한국 측 협상대표가 이를

MB가 기가 막혀

날 아침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는데 있어서는 양동시장의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아, 대통령이 그러라고 했나보다고 짐작한다. '얼리덕(early duck)'이란 신조어도 나왔다. 머슴론을 강조하던 MB를 따라 새벽부터 출근하던 '얼리 버드'형 새 정부가 벌써 '데임덕'에 빠졌다는 비꼬임이다. 얼리덕의 첫발질은 대북문제에서 맨먼저 나온다. 앞으로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없다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 했지만 김정일 정권은 또다시 남한 무시정책을 구사해버린다. 크리스토퍼 힐을 싱가포르 불러 핵

불봉화 신고 약속을 해주고 영변 원자로 가동 기록을 통째로 미국에 건네준다.

미국은? 불량국가니 뭐니 언제 그랬냐는 듯 북한에 식량을 보낸다. 제네바 핵협상때 YS정부가 그랬듯 한국은 또 허둥댄다. 아사자 대량발생이 우려된다며 정부 측에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한 사람은 아니러니컬 하게도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다(19일 통일부 당정협의), 외교부장관은 다음날 '퍼주기'식량지원을 발표했다.

내치(內治)의 스타일을 구겨놓은 건 중

국이다. 공권력의 회복, 불법집회 엄단을 선언했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수도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릴 때 정부의 경찰력은 무능 그 자체였다.

일본이 또 MB를 난처하게 한다. 단골 메뉴 독도다. 문부대신이 불을 지르고 관방대신이 살짝 불을 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껏 유희 제스처를 보인데 대한 첫 반응이건 기가 막히다.

경제 하나는 확실하게 살릴 줄 알았는데 그가 취임하자마자 국제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기름값은 치솟는다. 물가는 뛰고

일지러는 늘지 않는다. '경제 메시아'를 원했던 국민들, 조급한 코리아인들의 실망을 수밖에 없다. 둘러보면 모두 MB를 고달프게 하는 환경을 뿐이다.

지지받는 정책이 진짜 실용

우리는 여기서 참여정부 386들에게서 질리게 보았던 '혁신 피로증'의 재판을 본다. 불도저란 별명답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MB와 그와 보조를 맞추려 허둥대는 참모들의 설익은 새 정책들이 국민들엔 또 하나의 새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영어필입교육·초중고 자율화 정책·5+2 광역 경제권·혁신도시 재검토·수도권 규제 완화·지방재정 10% 삭감·공무원 구조조정 등등 날만 새면 말로만 터지는 매머드급 정책전환은 국민을 피곤하게 할 따름이다.

시키고 파동의 와중에 경기도의 한 고교생이 인터넷에서 장난삼아 시작했다는 대통령 탄핵서명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국민은 다수가 아닐 것이다. 비록 지금 뒤뚱거리고 있지만 그의 성공과 대한민국이 부강을 바라는 건 누구나 같다. 대통령 이어, 국민은 현대건설 직원이 아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도 아니다. 국민의 힘을 실어 헤쳐나가는 개혁이 진짜 실용이다.

/편집부국장 kycho@kwangju.co.kr

시설

확산되는 먹을거리 '공포' 방치할 건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먹을거리 최대 소비시장인 서울까지 번지고 있는데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논란이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먹을거리 공포가 장거화되면서 축산 농가와 육류 관련 유통업체, 음식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이다.

산지 한우 가격은 한 달 새 3.8~7.3% 떨어지고 그나마 거래량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료값은 1년 만에 40%나 올랐고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대통령 탄핵서명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국민은 다수가 아닐 것이다. 비록 지금 뒤뚱거리고 있지만 그의 성공과 대한민국이 부강을 바라는 건 누구나 같다. 대통령 이어, 국민은 현대건설 직원이 아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도 아니다. 국민의 힘을 실어 헤쳐나가는 개혁이 진짜 실용이다.

육류 관련 유통업체와 식당도 큰 타격을 입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

들의 기피로 매출이 푹 떨어져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AI와 미국산 쇠고기 발(發) 먹을거리 공포가 확산농가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먹을거리 공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AI는 닭이나 오리를 고열에 의해 먹으면 사람에게 감염될 염려가 없다고 한다. 한우의 안전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막연한 공포감에 한우, 닭, 오리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만큼은 확실히 근절시킨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한우육 원산지표시 특별법' 제정이나 한우생산이력제 정착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가금류에 대한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AI가 토착화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아무런 '소득'없이 끝난 여야 영수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영수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이 주요 의제였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가 실망스럽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손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회담 결과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미 FTA의 조기 비준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관문으로 FTA의 비준을 꼽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양보 없이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가 왜 영수회담을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영수회담을 통해 얻고 싶던 국정 현안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기대는 어긋나고 말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 것은 불가늠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가 왜 영수회담을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영수회담을 통해 얻고 싶던 국정 현안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기대는 어긋나고 말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 것은 불가늠할 수밖에 없다.

민심 이반은 심각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태도에 대한 지지율은 20%대 초반까지 추락했다.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한 협상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민심을 의반한 채 헛거북기를 고집해선 국력을 낭비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게 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상하



사회복지사업은 역사적으로 민간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망령은 국가책임에 의한 공적 사회복지의 불려들었다. 대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케인즈 사상에 의해 회생되어 고도 성장기를 누렸으며 관료화 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려왔고 그 해결책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다시 불려와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올직한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시장 또한 만능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시장실패로 인한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시장에 맡기느냐 정부에 맡기느냐의 문제가 논점은 아니다. 사회복지가 지닌 특징과 그 나라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사회·문화까지도 고려된 운영방식이나 기술 상의 문제로 집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목적

기고

양상용



제10회 담양 대나무축제가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서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120여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 이번 축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대나무를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축제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축제 초반 갑작스런 고온현상과 우천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아준 관광객, 준비·진행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 도로변과 축제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대나무축제를

도구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9회 대나무축제는 562여여인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와 246여여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보다 대나무축제가 담양군을 상징하는 대표적 브랜드로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모두 대나무축제를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제11회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

대나무축제, 또 하나의 브랜드로

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크나 큰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향토음식관 운영과 여자 화장실 부족 등 운영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도 노출됐다.

죽녹원 앞 담양특산기념품 판매점의 중국산 제품 판매나 원산지표시 미이행 등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을 극복하는 문제와 지역민들의 축제에 대한 의미·이해의 공감대를 더욱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과제도 남겼다.

요즘 축제는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를 강하게 담고 있고 교육적 가치도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 마케팅, 도시민들의 관광여행지로의 정착, 지역 영농상품이나 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빼놓을 수 없는 지역개발의 전략적

는 장·단점을 파악해 새롭게 준비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요소들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축제에 대한 편향된 기대감, 성공 실패의 과신, 평가기준의 자의적 적용 등 축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대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인력의 교육과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 서비스 마련 등 맞춤형전략이 필요하다.

대나무축제를 담양군의 성장동력이자 문화·경제적 자원으로 소중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은 물론 양의 회와 집행부의 공적자 그리고 축제 관계자들의 슬기로운 노력이 절실하다. 대나무축제는 이제 담양의 또 하나의 상품이기에 때문이다. <담양대나무축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성범죄 피해 아동 치료기관 확대를

날이 갈수록 성범죄 피해 아동이 늘고 있다.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성범죄는 그 특성상 심각한 정신과 육체적 후유증을 남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하고도 확실한 재활치료와 후유장애 제거가 중요하다. 하물며 피해 당사자가 아동인 경우엔 더할나위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들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공포감, 피해의식등을 상시로 가지고 산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흔한 일이다. 성범죄 피해 어린이들은 커가는 과정에서 다시 상처가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제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를 위한 전문 시설과 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전 국회회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정신적 충격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를 제대로 갖춘 전문치료센터는 전국에 단 세 곳 뿐이었다. 다른 병원이나 상담소가 연계돼 있는 곳도 30곳 뿐이라고 한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늘는 숫자에 비해 치료기관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께 늘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거나 부모가 먼저 포기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몸과 마음에 크나 큰 상처를 입은 피해 어린이와 부모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울목동

사회복지 시장화 바람직한가

장과 정부 사이를 오가면서 누가 더 정의롭고 올바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해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과 정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로운지 분명하다면 사회복지의 시장화는 전혀 우려할 일도 아닐 것이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가 사회복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상업화로 진행되는 시장화를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노인복지분야는 시장에 내몰리게 된다.

심지어 국방이나 방송 공기업의 민영화를 논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시장에 맡기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는 정부의 재정위기와 비교육성을 지목하고 있다. 시장은 자원의 효

용을 위해 사회정의의 실현한다는 이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부문의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선진국은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소득재분배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소득재분배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시장과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주대 교수·2007년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청소년 언어순화 특별 대책 필요

학생들의 대화에 욕설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욕설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다.

아름답고 쓰기 편한 우리 말과 글이 인터넷 채팅과 거리의 광고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날마다 변형되거나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욕설은 점점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학교폭력에 더불어 언어폭력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욕설이 가득한 청소년들의 언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은 책에서나 나오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청소년들이 바르고 고운 우리 말을 쓰도록 기성세대들이 나서야 하며 교육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학생들의 언어순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또 언론에서도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적극적으로 이들의 언어순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無 等 鼓

"귀한 손님을 맞을 때마다 가는 유명 고깃집인데,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왔더니 정말 분하고 놀랍다. 어떻게든 피해를 구제 구제받아야겠다는 데 길이 없어 막막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광주의 한 고급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댓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매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해 변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었다.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 특별법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최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이 역시 법무부 소관 특별법 형태여서 식품 집단소송법의 모

식품 집단소송제

태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품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 열리게 돼 향후 먹을거리 불안에 떠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식품 집단소송제란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표 한 사람이 소송을 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품안전관리 주요 대책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에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업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식품 집

단소송제 도입 조항을 삭제한 채 최근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정부의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이 무산된 배경이다. 정부가 이의 대안으로 특별법 추진을 하고 나선 것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 그 보상금이 열린다니 천만다행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